

---

2004년 제 1차

학술 토론회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심화의 전망 -

발표 : Jayant Lele (캐나다 Queens University 명예교수)

RadhiKa Desai (University of Victoria 교수)

토론 : 김 승 국 (평화 활동가)

박 은 흥 (성공회대 교수)

통역 : 이 대 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때 : 2004년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세계화인가 제국주의인가?

Radhika Desai

한국에 방문한 것은 처음이고 한국의 활동가와 지식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세계화인가 제국주의인가 입니다. 즉 현재 세계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계화 되고 있는 질서인가, 아니면 제국주의화 되고 있는 질서인가를 살펴보고 어느 쪽이 더 유용한 이해 방식인가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실제로 세계질서가 세계화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종결단계에 왔고, 종결이후의 세계질서는 보다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군사적인 제국주의 질서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가 종식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는 사람들이 현재의 세계질서에 대해 ‘세계화’라는 표현보다는 ‘제국주의화’라는 표현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 논점은 기존 정치경제학회에서 지속되었던 여러 가지 논의들, 로버트 브레너(Robert Brenner)의 경제사, 조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의 세계 자본주의 진화에 대한 이해, 피터 고완(Peter Gowan)의 세계화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에 관한 논의 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논점을 다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여러분의 관심을 함께 촉구하고 공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제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장치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힘, 부패 그리고 경제적인 동기와 이익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세계 자본주의의 정치적인 방책들은 하나의 패권국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세기의 그 단일국가는 미국이었죠. 미국의 패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20년 동안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헤게모니는 군사적 우월성과 세계 생산의 압도적인 부분을 주도하는 생산력,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두는 중심적인 패권국가로서의 위치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이 패권이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헤게모니 또는 미국의 제국주의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말에 걸쳐서 미국을 움직였던 중요한 동기는 냉전하에서 서방과 동아시아의 복구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이 경제적으로 복구가 되면서 두 지역에 있던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생산과 수출의 커다란 부분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경제 재건으로 말미암아 제조업에 있어서의 과잉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결국 세계경제를 점진적인 침체로 귀결되었고 그 후유증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자체 경제가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질 정도의 자원들을 요구하는 값비싼 전쟁에 개입해 왔습니다. 미국의 헤게모니의 문제들 중 첫 번째 징후는 미국이 채무국가로 전락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채무국으로 전락한 그 시기 이후의 미국의 패권에 관한 이야기는 문제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이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전례에 없었던 수준으로 군사적 우월성을 추구합니다. 경제적인 전선에서 미국 제조업이 취약해지면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미국은 두 가지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군사적 우월주의와 미국의 제조업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전 세계가 미국에 달러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채무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미국 경제는 현재 구매력을 보장할만한 제조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핵심적인 시장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은 외부의 투자자금의 유입 없이는 투자 붐을 유지할 수 없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현재와 같은 군사 행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점의 두 번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군사 행동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인데, 이것은 미국 혼자 감당할 수 없고 다른 국가로부터 돈을 차입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나는 기존의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해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결부되어 있거나 또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세계가 계속해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은 경제력을 회복하고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케인즈적 방법을 썼습니다. 유가가 상승했을 시기의 경제적 의미라는 것은 유가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것이고 달러의 가치저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 세계가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혈을 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정책, 즉 케인즈적인 정책과 고유가 달러가치 유지정책

은 상호 병존할 수 없었습니다. 케인즈적인 통화정책을 쓰면서 달러가치가 저하되는 추세는 세계가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압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초기에 1온스당 금값이 875달러까지 치솟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달러가치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을 구제했던 것은 당시 세계 경제가 달러화를 없애고 나서의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금본위 제도로 돌아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생각할 수조차 없었죠. 첫째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세계의 화폐공급이 변덕스런 금 생산에 의존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로는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것은 그 당시 세계 최대 금생산국인 소련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대해서 허용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이런 패권의 약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긴축통화제도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과 미국이 경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대규모적인 산업구조조정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은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다른 자본주의의 두 핵심 축이었던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대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높아진 달러는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혔고,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결국 미국은 여타의 경쟁국들과 자국의 달러통화를 재평가하기로 하는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맺게 됩니다.

레이건 행정부 당시인 1980년대에는 군사적 케인즈주의라는 경제정책이 추구되기도 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역시 미국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으로 유입된 자금은 생산업으로는 갈 길이 없었고, 소위 FIRE라고 약칭되는 산업부문, 즉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으로 집중되었고 이것이 1987년의 증권시장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경제적인 세계화의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나는 이 추세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와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군사비 지출과 통화가치의 조절에 의해서 미국이 미국의 동맹국과 기존의 정책을 지속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계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화는 근본적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가 미국에 대해서 기꺼이 그 전보다 더 많이 자금을 빌려 준다는 것이고, 그것이 특히 미국의 사유 산업에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화에 병행되는 하나의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자본의 흐름, 특히 단기 포트폴리오 투기자본

의 흐름의 장애물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가 미국으로 자본을 유입하기로 희망했던 근거는 미국에서 90년대에 발생했던 투자붐 때문입니다. 이 투자붐을 주도했던 것은 미국의 금융제도였는데, 이것이 전 세계의 자본이 유입되도록 하는 일종의 유입펌프 같은 역할을 했고 이 돈이 미국 경제로 들어갔습니다. 투자 붐 현상은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자금을 유입하는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전체가,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전체가 활성화 되고, 이것이 전 세계에 걸쳐 이 분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기초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정보통신 기술 분야가 제조업 생산성 일반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1990년대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은 이익 또는 생산성 증가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부풀려진 기대들로 자극되어진 투자 성장과 자산 인플레이션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거품경제였지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제 성장은 거대 소비붐에 의존했던 것인데 이것은 증권시장의 인플레이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은 매출의 붐을 탔습니다. 저축대신에 소비로 비용이 많은 부분 지출되고 있었다는 뜻이죠. 미국 기업의 이러한 활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로 저축을 중심으로 금융을 구성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투자를 중심으로 주가를 올리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1980년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은 미국과 같은 급격한 제조업 위축정책을 추구하진 않았지만, 높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미국에 계속 자본을 조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동시에 미국의 소비붐을 통해서 자국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품이 2000년도에 붕괴했을 때, 미국 외의 다른 세계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 투자할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화의 종말입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의 시작은 바로 미국이 쇠퇴해가는 헤게모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아직까지 미국에 자금을 제공해서 채권시장과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고 불안정한 수준입

니다. 현재 세계가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어떻게 갖고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세계화시대의 그것은 미국 경제에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동기였지만, 이제는 미국이 추구하는 제국주의화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유로화의 등장,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소비품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2000년대 전까지의 증권시장의 거품 경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택시장의 거품경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사람들이 세계화라는 용어보다는 제국주의화라는 용어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 제국주의는 굉장히 불안정한데 그 두개의 주요 불안정성은 바로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입니다. 경제적인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과잉설비, 과잉 투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경제 성장이 다른 자본주의 성장의 두 핵심, 즉 유럽과 동아시아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이 두 경제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두 지역의 시장을 제약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미래의 미국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안정된 헤게모니에 필요한 경제적인 우월성을 쟁탈하는데 더욱 더 실패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금융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경제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석유자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바로 자기 경제적인 경쟁 국가들의 손해를 낭게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유럽과 동아시아가 미국의 석유 장악전쟁을 얼마만큼 용인할지 그것은 중요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화'의 국면은 미국의 불안정한 헤게모니가 작동했던 시기였다면, '제국주의'는 동시에 이것이 더 불안정하고 더 변덕스럽게 작동하는 새로운 시기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Globalization or Imperialism?

Radhika Desai

I would like to begin by expressing my great pleasure at addressing an audience such as this, consisting of activists. And I would like to thank the organizers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he story I have to tell today is about how we are to conceptualize the global order today. Until recently, the term 'globalization' seemed to be the favoured term, used by both those in favour of and opposed to, the global order. While there were some who contested the very term, arguing that what we were witnessing was simply the normal operations of capitalism which had been 'global' since its birth, it was hard to entirely refute the fact that 'globalization' did denote a distinct stage in the development of global order of capitalism. Today I want to make a slightly different argument: that globalization was indeed such a distinct stage in the development, and further that its distinction did not lie in any specifically new 'economic' processes but in the larger configuration of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US hegemony over the world capitalist order, a hegemony which has been, however, unravelling over the last 30 years. Finally, I wish to argue that this stage in the unravelling of US hegemony, a process which began in the late 1960s, is now concluded and that we are now living in yet another, even more militaristic and violent, phase of this process. My argument has implications for the political practice of those who oppose the current dispensation of power in the world.

The most obvious symptom of the conclusion that globalization is over is the increasing use of the word 'imperialism' or even the 'new imperialism' to describe today's US-dominated global political economy. It may not be entirely accurate and some have preferred to call 'it' merely the 'new militarism'. Be



that as 'it' mean, I am going to try and state, as simply and clearly as I can, how this came to be and what it represents. In doing this, I am relying on the economic history of Robert Brenner, the account of the evolution of the world capitalist economy given by Giovanni Arrighi, and the account of the US role in building and maintaining globalization by Peter Gowan and other writers within the tradition of political economy. It is a complex argument, one in which a talk as short as this can only hope to arouse your interest. I look forward to discussing additional elements of it which interest you particularly in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Here, I will try to follow only the main sequence of the argument.

World capitalism has not been merely an economic system: it is underpinned by political arrangements which are enforced through a combination of force, fraud, economic compulsions and consent. These political arrangements have, in the history of world capitalism (which has also been the history of nation-states), been managed by a hegemonic power. According to Giovanni Arrighi, over the last 600 years, these powers have been the Italian city-states, the Dutch, the English and, in the 20th century, the Americans.

US hegemony was at its peak in the two decad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is hegemony rested on the US's military superiority, on the US's command of a majority of world production, and, on the strength of that, its corresponding position as the world's greatest creditor nation. By the late 1960s, however, this US hegemony was in trouble. On the one hand, Cold War compulsions had ensured that the US must facilitate the recovery of Western Europe and East Asia. As this reached fruition, these competing centres of capitalist accumulation began to eat into the US's share of world production and exports. (This development also created the world-wide overcapacity in manufacturing, resulting in a general slowdown in growth, from which we have yet to recover). On the other hand, the US was engaged in costly wars which required resources which the US economy was decreasingly able to provide. The first

sign of the troubles of US hegemony was that the US became a debtor nation.

The story of US hegemony since that time is the story of how the US has managed, and attempted to overcome, this problematic situation. It has been a period of 'unstable hegemony'. On the one hand, the US has built its military superiority to previously unscaled heights: today, by one account, US military power is greater than the next nine states combined. On the other, economic, front, the maintenance of US hegemony on a weakening manufacturing base has come to mean two main things—both of which require that the rest of the world remain willing to lend the US money, which means, in effect, to hold dollars. Firstly, the US economy has increasingly come to act as the market of last resort for its competitors, in particular Japan and the rapidly industrializing East Asia, at a time when it is unable to generate the exports to finance its net purchases. The latter have effectively been lending the US money to purchase their exports and, in the 1990s, to finance an investment boom. Secondly, the expenses of its military actions abroad must be borne. In this context, there have been two main questions: How to regai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to an extent that would finance its hegemony and/or how to ensure that the rest of the world remains willing to lend it the money, basically to hold dollars, to finance its hegemony.

In the 1970s, the US engaged in traditional Keynesian-style economic management to revive its manufacturing economy and regain its export markets. At the same time the hikes in the price of oil ensured that the inflated value of this trade, denominated in US dollars, would mean that the world continue to hold dollars. However, the two strategies were not compatible and the fall in the value of the dollar due to Keynesian-style monetary laxity threatened to undermine the world's willingness to hold dollars. For example, at one time, in the early 1980s, the price of gold reached \$875 .00 per ounce, signalling a run on the dollar. What saved the US at this time was that the rest of the world did not have an alternative to the dollar. Returning to a gold standard was quite

out of the question for two reasons: the fate of the world money supply could not be made reliant on the vagaries of world gold production (this much had been clear after the Great Depression), and because this would also give the USSR, as the largest producer of gold, a politically unacceptable leverage over the fate of the world capitalist economy.

The 1980s saw another attempted resolution: the tight monetary policies which the US began to pursue, driving up the value of the dollar, as the US now sought to compete aggressively for capital all over the world. This was combined with a big shakeout of industrial capacity in the US. This shakeout was not enough to solve the underlying problem of manufacturing overcapacity in the world as a whole particularly given that the other two centres of capitalist accumulation refused to undergo a shake-out of similar magnitude. A high dollar was bound to hurt US exports and eventually, in the middle of the decade, the US managed to get its main competitors to agree to re-value their currencies against the US dollar: the famous Plaza Accord.

Another motor of growth in the 1980s was the famous 'Military Keynesianism' of the Regan Administration. The influx of capital into the US economy at a time when it had few outlets for productive investment swelled the so-called FIRE(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 sectors, and also led to the stock market crash of 1987.

The 1990s would have continued these underlying trends of managed de-and re-valuations of currencies between the US and its allies and military spending. But in fact it became the decade of globalization, particularly during the period of the Clinton presidency. Globalization was essentially the ideology under which, for a time, the rest of the world seemed to quite happily lend the US more money than ever before, and moreover, lend it to US private industry. A related aspect of globalization was the systematic breaking down of barriers to the flow of capital -as short term portfolio investment in particular- across the

world and particularly into the US. This was an enterprise in which the IMF and the World Bank, two key portions of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f US hegemony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played a key role. The willingness of the rest of the world to lend the US money rested on the huge investment boom which was engineered in the US. In effect, during the 1990s the US-dominated world financial structure acted as a giant pump sucking up capital from the rest of the world and pouring it into the US economy, fuelling the investment boom. This boom was concentrated in th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ector.

The general idea was that this boom would not only revive US manufacturing but also place the US economy in the position of being the leading manufacturer of a 'core technology', a technology whose application would raise productivity anywhere in the US and the world economy, thus placing the manufacturers of the core technology on a reliable growth path. Motor transport and oil had been such a technology in the past and it was expected that ICT would do the same. The results, however, were dubious in many ways. Most fundamentally, the ability of this core technology to raise manufacturing productivity consistently is a much-debated issue. More to the point for us, however, is the fact that while the US economy grew at a great pace in the 1990s, this growth combined investment growth, fuelled by swollen expectations of future, which did not necessarily translate into either profit or productivity growth, and asset inflation. It was, in effect, a 'bubble' economy. It was also, as we know, fuelled by a great consumption boom, partly based on the inflation of the value of stocks which made US households feel richer -the so-called 'wealth effect'- and partly on a massive dis-saving by US households and corporation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US corporations, which had historically financed their investments through retained earnings, were now offering shares to finance a considerable part of their new investments.

The rest of the world, particularly the Japanese, and to a lesser extent the

Europeans, who had not imposed on their own manufacturing sectors the showing contractions which the US and the UK had in the 1980s, were willing to finance this boom both in the expectation of high returns (expectations which were fuelled by the statements and actions of the US Federal Reserve), and as a way of lending money to US consumers to purchase imports. When this bubble burst in 2000, with it went the willingness of the rest of the world to invest in US equity market to the unprecedented extent that it had done in the 1990s. *This was the end of globalization.* The onset of the War on Terrorism began to reveal an entirely new phase in the US to attempts to regain its declining hegemony. It may well be the self defeating last.

Today, the rest of the world does remain willing to lend the US money through its bond markets, and to hold dollars, but this process is a far more political and unstable one. The reliability of the US dollar as a store of value, the fate of the US's war on imperialism, the existence of the Euro and other such factors, rather than any 'economic' expectation of returns from the US economy as under globalization, will now determine the willingness of the rest of the world to hold dollars. While the US domestic economy continues to experience a consumption boom, this is now financed by the 'housing bubble' to replace the 'pre-2000-stock market Bubble' and its associated wealth effect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word 'globalization' today enjoys a decreased currency and has been replaced by 'imperialism'. Today's US imperialism is, however, profoundly unstable and the two main instabilities are political and economic. The economic instability is that without solving the underlying problem of overcapacity, the growth of the US economy tends to constrain growth in the two other main centres of capitalist production: the US economy has grown, since 1980s at the expense rivals. The extent to which the US succeeds in this, it constrains the growth of its markets, further constraining its own future growth. To the extent that it fails, it fails, more simply, in the attempt to regain its former economic superiority which can be the basis of a

stable hegemony. The political instability is that the US war on terrorism relies on financing from the very states against whom it is ultimately directed: the extent to which the Europe and East Asia will tolerate and finance the US's control over West and Central Asian oil which it means to use as an instrument of its power over these rival centres of capitalist production may legitimately be doubted. In conclusion: 'globalization' was a phase of the exercise of unstable US hegemony and 'imperialism' is the new phase, a phase which promises to be even more volatile. Thank you.

##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Jayant Lele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심화의 가능성, 전망에 대해서인데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백그라운드 발표를 해 주신 데자이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전망은 낙관적인 측면과 비관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두운 측면은 앞에 데자이 선생님이 발표했던 맥락에서 세계화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 이어지는 미국의 제국주의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를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 과정에서 세계화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것은 현재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대테러전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이것이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에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수사학적으로는 민주화를 지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든 사회적인 투쟁을 통해 획득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탈민주화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시아에서의 민주화 물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실제 미국과 동맹국들이 탈민주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심화를 방해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의 전망이 밝은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이러한 탈민주화 기도에 대해서 단순히 이론적인 측면 뿐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한국의 민주화 투쟁이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을 위한 핵심적인 것은 민주주의 성격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는 데 그 중에서도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식적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측면은 '실현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의 장입니다.

현재 민주주의의 성격과 미래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핵심적인 두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시민사회입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많은 논의들은 어떤 내부의 전제를 담고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국가와 시민사회간에 내재적인 적대관계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 시민사회는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대신에 저는 국가를 이렇게 개념 짓고자 합니다. 국가는 내재적인 긴장이 존재하는 제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긴장은 축적의 기능과 정당성의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민주국가이면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로서 국가는 축적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본이 그 나라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손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국가로서 국가는 실제로 지배적인 자본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주장해야 될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국가를 매우 불안정한 긴장상태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국가는 한편 세계화 프로젝트나 제국주의 프로젝트에 조우되기 쉬운 영향도 있고, 동시에 민중이 자기들의 결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공간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시민사회 개념 자체는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시민사회는 종종 국가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모든 종류의 비정부 기구가 포함되기도 하고, 모든 종류의 사회운동이 포함되기도 하고, 지역의 작은 친교모임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운동까지 포함합니다. 저는 이러한 논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와 위로부터의 시민사회를 구분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내에서도 긴장이 존재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특혜계층, 중간층을 포함한 특권계층의 담론이 존재하겠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는 피억압계층의 침묵으로 점철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저항이나 봉기 등등의 기존의 들어보지 못했던 담론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젠더 관계에서의 억압으로부터 나타나기도 하고 인종관계에서의 억압으로부터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파괴하는 환경파괴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나타나기도 하고, 노동자의 임금이나 생활조건과 삶을 파괴하는 체계적인 억압에 대한 계급투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동시에 특권계층의 담론이라는 것이 이러한 피억압계층의 저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세계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들, 사람들이 저항에서 나왔던 구호들을 자기 것으로 채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곤퇴치의 구호, 좋은 통치(good governance), 민중의 세력화 등의 개념들을 이제는 자본을 대변하는 기관들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저항 운동의 이러한 담론을 수용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통제할 수 없는 더 큰 저항을 야기한다는 것이 마치 수수께끼처럼 등장합니다.

민주주의 심화에 관한 논의에서 제가 충분히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논점은, 이것이 저의 종합적인 답은 아닙니다만 일종의 제안적인 논점이 되겠는데, 그것이 투쟁의 공간으로서의 민족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논점입니다. 외부의 요소로부터 또 내부의 요소로부터 위압을 갖고 있는 민족국가가 투쟁의 공간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이지요. 외부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와 제국주의의 이해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부 압력이라는 것은 외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내 세력을 의미합니다. 민족국가에 위협이 되는 국내 세력은 순수하게 국내세력일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세계화의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저항, 외부로부터의 압력 하에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사회에서 저항의 모습들이 굉장히 고도로 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심화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내부의 심각한 분화문제를 조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국가가 외부의 압력이나 상층계급의 압력으로부터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를 강화시키면서,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이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두 가지 접근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것에서 빠진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공영역의 중요성입니다. 두 가지 과제, 즉 시민사회 분화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에 대립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외부압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두 가지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과제를 추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것은 공공영역의 창출입니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세 가지 중요한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언론, 정치정당, 그리고 학계의 소속여부에 상관없이 예술가를 포함하는 지식인입니다. 많은 경우에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논의에서 이 세 가지 행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언론, 정당, 지식

인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행위자가 서구에서 민주주의 이행의 초기부터 중요한 행위자로 작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계 모든 곳에서는 바로 이 세가지 행위자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그럼으로써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공동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가 그런 이해를 반영한 정책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현대 자본주의 상황에 처한 많은 나라에서, 아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이러한 언론, 정당, 지식인 그룹들이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여기에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예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다른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을 보면 시민사회의 문화를 통합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제도 혹은 행위자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훌륭한 노력을 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Globalization and Crisis of Democracy

Jayant Lele

Wherever democracy exists today, it only exists as an unfulfilled promise. Deepening democracy must involve struggles to make it deliver on its promise.

We need to look at the origins of the idea of democracy and its early history to fully understand the promise it contains and to discover the reasons why it has failed. We must remember, however, that its existence, as it is, is vital. In order to keep its promise alive, we must work to protect it when and where it is threatened by authoritarianism.

Today much of the discussion about deepening democracy revolves around the question of state-civil society relations. Many civil society activists argue that the state is under the control of dominant interests in society. It is incapable of protecting and advancing the interests of many of its disadvantaged citizens and even contributes to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such as : gender and race discrimin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that threatens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many people, in the name of development, and class oppression by rapidly decimating the hard earned rights of workers to decent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 guise of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state as a capitalist-democratic state exists in tension. It is caught between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interest of capital, which it sees as necessary for its own survival and its democratic claim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all its citizens, including women, farmers and worker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apital it must ensure a peaceful and unhindered accumulation process through which the savings of the working people are transferred to those who make decision about where to invest, what

to produce and have to distribute the products of social labour. The process itself is controlled by a privileged class, under conditions of capitalism. It demands as complete an autonomy from the state, for its decisions, as it can get, and yet it must depend heavily on the state to provide peace and order and to pay for what the economists call 'externalities' of capitalist production.

A book of the history of democracy shows that its major institutions, legislative, judicial and bureaucratic, were developed with the intention of ensuring that all citizens receive the same full protection of their interests and are fully able to contribute to the defining and advancing of the common interests of the entire society. The underlying promise of democracy has always been a promise of economic or material equality or substantive equality, a truly just social order and authentic freedom for all citizens, and full freedom to develop and practice their critical competence. Through these three ways, it was hoped, citizens will be able to take control of their lives as well as actively contribute to the making of decisions and policies that will enhance the quality of their lives together as citizens. Instead, what democracy has been able to deliver so far, in Asia as well as in the West, is a minimum of equality (as 'equality of before law' or 'equality of opportunity'), a modicum of justice (in the form of 'rule of law') and merely formal freedom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I don't wish to downplay the importance of these contributions of formal democracy. But we must recognize them for what they are : they are only the tools that we have and can use,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to transform formal democracy into substantive (participatory, radical) democracy.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includes, primarily, civic organizations(NGO) that pursue a variety of activitie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specific, targeted groups and communists of citizens and social movements that address the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such as races, gender, environment, class, human rights) and seek an end of it. The debates about relationship is the state tend to emphasize the need to bypass or confront the state. There is a general

tendency to shun cooperation with the state for fear of co-optation or decimation.

In view of the tension inherent in the very nature of a democratic state, a tension that is exacerbated by the forces of globalization, we need to reexamine the approaches to the state. I wish to introduce a third, middle, term in the state-society relation : that of the public sphere. As conceived by the early promoters of democracy it is a social space where citizens representing highly diverse interest can communicate freely and without pressure from dominant groups or interest with full access to all necessary knowledge and arrive, as citizens, at common goals, by forming informal public opinion. Such goals must enrich and not suppress diversity. The main avenues, self proclaimed, of the public sphere are : the media, political parties and academic and non-academic intellectuals.

**<토론>**

▶ **김승국** : 저는 데자이 선생님 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는 세계 상황과 미국 제국의 현상에 대해서 개념상에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계화를 제국주의의 한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세계화와 제국주의가 상당히 연동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세계화와 제국주의 현상을 바라볼 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세계화의 말기현상이 아니고 지금도 신자유주의 등의 위세가 워낙 강력하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동시에 제국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이 한반도 통일에 저해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단계가 끝나고 제국주의의 단계로 돌입하고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고 한반도에서는 세계화와 제국주의 현상이 동시에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데자이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현장운동가로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파병 문제에 대해서인데, 현재 미국의 스테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아래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이라크에 파병되고 한국군도 파병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좀 거창한 얘기지만 한·미·일 삼각 군사공동체가, 또는 일본의 동맹이 이라크 파병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구조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스테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하에서 벌어지는 군사적인 블록화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데자이 선생의 달러 블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운동으로서는 달러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얘기는 곧 달러의 패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국제운동이 제국 미국의 횡포를 저지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유로 달러를 쓰고, 한국정부도 대외지출을 할 때 유로 달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러 블록에 대한 대안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 화폐와 중국 화폐 그리고 한국화폐가 변증법적인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아시아 화폐를 만드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특히, 한국정부가 얘기하는 동북아 허브기지 논의와 연동시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우 허무맹랑한 얘기같지만, 달러불매운동이 미국 제국주의의 허를 찌르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IT경제의 군사화에 관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한국도 최근에 IT부분의 군사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국방부의 증액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이것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아울러 데자이 선생께서 미국의 경제발전이 유럽과 아시아의 희생에 의해서 관철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발전의 결과가 미국의 제국주의의 성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유라시아 연대, 즉 평화를 위한 연대를 통해서 미국 제국주의의 패권을 견제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요즘 얘기하는 시베리아 철도라든지 시베리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박은홍** : 우선 데자이 선생님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국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제국주의 개념과 세계화 개념을 나누는 것에 덧붙여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한다면 1980년 중반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에서 금융사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 이후로 미국에서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금융산업이 빠져나가는, 즉 금융 세계화를 신자유주의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데자이 선생님은 오히려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현상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이해하는 것부터 저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얘기하자면, 그 제국주의의 얼굴이 좀 부드러운 얼굴을 할 때, 즉 주로 소위 월스트리트의 경영력이 큰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부드러운 얼굴의 제국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이 압도적일 때 거칠은 얼굴의 제국주의라고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제국주의 속성은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즉 부드러운 얼굴의 세력과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다 강경한 얼굴의 세력간의 내부적인 투쟁의 과정이고, 그 힘의 밸런스에 따라서 미국의 제국주의가 강경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논리와 행동을 세계화와 제국주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내부의 이러한 강경한 얼굴을 하고 있는 보다 보수적인 세력과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보다 온건한 세력간에 이중적인 흐름이 내재하는 걸로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부시 정권은 강경한 얼굴을 하고 있는 보다 보수적인 세력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부터 소위 미국 금융가를 상징하는 조지 소로스가 계속적으로 부시 낙선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봐도 미국 내부에 월가 세력과 군산복합체 세력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렐리 박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제국주의 얼굴이 강

경한 얼굴을 하든, 부드러운 얼굴을 하든, 아시아에서는 그러한 제국주의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군부정권에 있든, 민간정권이 되었든 간에 형식적 민주주의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실질적 민주주의의 이행이 장애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버마의 군부정권,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 정권, 필리핀의 아르요 정권 그리고 태국의 탁신 정권 등이 모두 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논리를 빌려서 자신의 보수적인 정책과 지배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민사회의 주장과 논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시민사회에 균림하는 국가'를 정당화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정부의 논리라고 정당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업적으로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인데, 심지어 민주화가 된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신자유주의 하에서, 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면 하에서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보수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리 박사님께서 언론, 정당, 지식인 집단 등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에 대한 주장과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이른바 NGO 내부의 협력도 있지만 일정한 갈등도 있다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나 정당, 지식인들이 중심으로 민주화가 일정정도 이루어졌지만은 엘리트 민주주의라는 어떤 일정한 불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국의 경우에 이른바 민중헌법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헌법이 1997년에 제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했는데, 그 법 내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NGO 내에서의 PO(People's Organization)집단에서는 이러한 새 헌법이 결국은 엘리트들에 의한 헌법이고, 결국 이러한 새 헌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관리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자본의 논리가 반영된 헌법에 대응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농민의 목소리, 그리고 PO그룹의 어떤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채널이 만들어지고, 그를 위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Radhika Desai** : 두 분 토론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과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제가 사용했던 용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화와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세계화라는 용어가 1990년대 초반부터 쓰이기 시작했을 때, 많은 비판적인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세계화되어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1990년대 세계 자본주의가 획득했던 세계 경제의 통합성이라는 것은 이미 1940년대에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비판적인 관점은 세계화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경제적인 세계화인 것처럼 쓰일 수 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국가와 국가 행위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행동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제 발표에서 세계화라는 용어를 시대를 상징하고 이해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발생했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용어로서 세계화가 쓰이다가, 더 이상 그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데 쓸모없는 용어로 사라지는 그러한 시기를 지칭하기 위해 세계화를 사용한 것이죠. 제국주의라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 헤게모니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미국 제국주의로 등치시킬 수도 있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미국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헤게모니와 제국주의 경우의 구분법은 제국주의를 부드러운 얼굴과 강경한 얼굴로 구분하는 그러한 정도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용어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인데요. 저는 신자유주의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독트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자원의 재분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는 경제적인 독트린이죠. 그러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정책이 제거되어야 된다고 신자유주의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 신자유주의적 경제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배적인, 패권적인 경제국들에 확산되어 자리 잡은 것은, 특히 영어권에서 1970년대 말과 80년대를 거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두 가지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대처나 레이건은 신자유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이라고 항상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념으로서 정상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이 정당화된 이념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자본의 축적을 지원하는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 정책의 주창자였던 대처 정권 하에서의 경제정책을 보더라도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이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구체적인 성격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처 정권조차도 온전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년대 초에, 즉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이 퇴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부시정권 하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더 친절한 미국’이라는 구호가 나왔었고, 영국의 경우에는 ‘자비로운 사회’가 정치적인 구호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를 세계적으로 대두시켰던 세계은행조차도 환경에 대한 고려, 좋은 관리, 빈곤 퇴치, 젠더에 대한 모델 등의 보다 유효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는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는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차원으로 뻗어나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정당성을 상실하기 시작할 무렵에 세계화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분 토론자가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용어가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세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최선의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맞는 지적입니다. 시기적인 구분으로 언제부터 제국주의 국면인지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항상 제국주의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가 제국주의 국면이고 언제가 아닌지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최근에 『일관성없는 제국』(Incoherent Empire)이라는 책을 쓴 Michael Mann은 더 이상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군사주의라는 말로 설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점에 동의할 수 없는데,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미국이 제국주의적이지 않다라는 데 중점이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11 사태 이후의 미국의 헤게모니의 새로운 국면을 설명할 수 있는 더 훌륭한 용어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은홍 선생님이 부드러운 얼굴과 강경한 얼굴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아마도 미국이 가장 부드러운 얼굴을 했을 때는 1950-60년대 전후복구를 위해 서유럽과 동아시아에 아주 강력한 복구정책을 추구했던 때가 아닌가 하는데, 그 결과 세계적으로 우호적인 경제 환경이 조성돼서 여러 나라들이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조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 중의 다수가 이러한 시대정책을 가

리켜서 미국의 이타주의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자들은 대부분 미국의 소위 '이타주의 정책'의 핵심적인 근거에 대해서 논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련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운동을 추구하든 간에, 20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빼놓고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소련이나 공산권 국가들이,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지라도, 그러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투쟁의 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세계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하고는 20세기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유럽에서의 복지국가의 등장과 동아시아에서의 토지개혁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공산주의 위협에 직면했던 최전선에 놓인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공산주의 위협이 없었더라면 다른 어떤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도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시도가 서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살기 좋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950년대, 60년대 가장 부드러웠던 얼굴 이후, 세계화라는 것이 제국주의의 부드러운 얼굴을 보이려고 했던 시도였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미국경제가 제조업에서의 경제능력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세계에 대해서 부드러운 얼굴을 취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미국의 헤게모니가 보여주고 있는 폭력적인 모습은 어떤 점에서 보면 필연적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필수적인 모습인데, 동시에 부드러운 얼굴에 역행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미국의 정책이 점점 더 비합리적으로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일단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거대한 비대칭을 볼 수 있는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최근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일본은 점점 군사주의적인 역량을 넓히고 세계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넓히는 데 나아가고 있고, 한국은 군사적인 면에서 보면 미국의 종속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두 나라다 높은 석유의존도를 갖고 있다는 점, 석유자원과 관련해서 미국의 정책을 따라감으로써 이런 자원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계속 미국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럽과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즉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것을 길들임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미국이 제국주의적 국가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자본주의국가들 중 일부는 지역에서 일종의 '준제국주의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진보주의 진영이나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러의 헤게모니라는 것은 그 이전의 어떤 때보다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세계의 석유 무역이 달러로 결제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 전에 사담 후세인 정부가 이라크 석유 대금을 유로화로 결제하겠다고 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달러는 금본위제처럼 기반이 없는 화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석유에 기초하고 있는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석유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달러로 결제되지 않고 다른 화폐나 다양한 화폐로 결제될 경우에는, 더 이상 달러가 실질적인 경제에 기초하고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세계가 달러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나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달러의 실질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운동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경제적인 추세가 달러가치가 중심 화폐로부터 계속 퇴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러한 북미사회, 즉 탈산업화되고 소비위주로 이루어진 사회로부터 한국에 와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산업주의 사회이고, 생산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가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 대답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Jayant Lele** : 두 분 토론자 선생님의 말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승국 선생님께서 한반도의 관점에서, 또 활동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참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은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위협되거나 저해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기하려는 주장, 즉 이러한 외부세력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국내정치에서의 활발하고 역동적인 공공영역의 창

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압력은, 그것이 부드러운 얼굴이든 거칠은 얼굴이든 이런 외부의 세력에 의해 작용하는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입니다. 조시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동유럽국가에서, 지금은 중앙아시아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실질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발전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아시아의 많은 정부가 정부형태와는 상관없이 경제성장이라는 논리로서 실질적인 민주화, 또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국가주도의 시민사회 쪽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제성장의 논리라는 것이 개발독재시절과 지금의 세계화 시대와는 그 내용상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 프로젝트에 따른 경제성장 논리는 국내의 극단적인 양극화, 즉 특권층의 특권유지와 비특권층의 권리 박탈을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행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이러한 경제성장논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를 강한 방법으로 억압하는, 즉 강경한 국가로 나타나게 되고 국가 주도의 시민사회를 위로부터 만들려는 모습을 강제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아시아의 몇몇 국가에서 국가가 직접 종교적 근본주의를 확산하려고 개입하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의 시민사회를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향이 계속해서 공공영역을 억압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민주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노암 촘스키가 얘기하는 ‘국가에 의한 동의의 제도’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서 도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부세력의 이러한 압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을 하는 국가가 있고 소극적인 수용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공공영역의 발전과 그 속에서의 공공여론의 조성은, 적어도 적극적인 수용국가를 소극적인 수용국가로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박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보수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발표 중에 얘기했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탈민주화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의 이러한 탈민주화, 또는 민주주의의 보수화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로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태국의 대중적인 단체 또는 민중적인 단체에서 이러한 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민주주의가 애국주의에 의해서 갈취당하기 때문이

쥬. 추세로 보면 민주주의가 심화되기에는 굉장히 어두운 추세가 지배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중단체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밝다고 봅니다. 태국의 경우에도 빈민연합과 같은 민주주의원칙에 충실한 대중적인 조직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밝은 전망을 밝게 하고 있고, 이러한 대중운동에 기반해서 새로운 정당운동, 새로운 언론 그리고 지식인의 새로운 역할이 규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는 태국의 탁신수상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태국언론이 실은 우호적인 논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동시에 이러한 동의에 기반한 언론에 대항하는 새로운 언론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